한일 경제전, 예산입법 지원 총력

민주당, 예산입법지원단 첫 회의서 "반드시 승리할 것" "일본 대응 2732억 · 내년 본예산 2조 증액 뒷받침" 약속 IAEA 등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데이터 증명 IOC에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일 경제전 예산입법 지원단'(예산입법지원단) 첫 회의를 열고 "예산과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해 한일 경제전에서 기필코 승리를 거두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일본 경제 침략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원내기구로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일본의 경제 침략 행 위에 맞서 법·제도 및 예산 지원에 주력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장은 재선의 윤후덕 의원이 맡았다.

이 원내대표는 첫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절대 꺾이지 않는 불굴의 DNA 를 가지고 있는 국민과 함께 한일 경 제 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한일 경제전에 맞서 정부의 산업역 량 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 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전 승리를 위해 과도한 대일(對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소 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가 절실하 다"면서 "분업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 기 위한 대·중소기업 논의가 한참이 며, 정부 또한 상생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산업 구조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민주당 역시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서 지원하겠다"며 "특히 소 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 수입구조 다변화를 확실히 뒷받침하고 지원하 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소재부품특별법 전면 개정 ▲조세특례법 개정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에 포함된 관련 예산 2732억원의 신속 집행 ▲내년도 본예 산에 관련 예산 2조 이상 증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단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환경노동위 원회 한정애·법제시법위원회 송기 헌·정무위원회 유동수·문화체육관 광위원회 신동근·기회재정위원회 김 정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 등 각 상임위 간시들이 포한됐다

상임위 간사들은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해 앞으로의 각오와 지원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에 대해 밝혔다.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기술 특례제도가 바이오 쪽에 상당히 치중 돼 있는데 소재・부품・장비 산업도 특례가 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문체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후쿠 시마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쿄올 림픽조직위원회에서 안전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준 적이 없다"며 "이번 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보건 기구(WHO)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 는 기관을 통해 안전보장에 대한 데 이터 증명을 도쿄올림픽조직위와 국 제올림픽위원회(IOC)에 요구하겠다" 고 발형다

단장인 윤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반도체 부분에 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반 도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산 화 진척을 위해 협약이 필요하다고 하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세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내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업계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환경규제 · 산업규제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런 문제도 (논의에) 있었다"며 "분야별로 상임위와 정책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 1차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 일본산 재활용 폐기물 3종도 통관절차 강화

석탄재 이어 8일만에 추가 조치··· 작년 기준 88만t 수입

일본산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 폐 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재활용 폐 기물 품목의 수입통관 절차도 까다로

워진다.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을 줄이겠다는 이면에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 드'성격이 짙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 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수입 재활용 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 품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 적으로 제기되는 수입 석탄째에 대한 통관절차 강화 방침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내놓은 두번째 대책이다.

수입통관 절차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지난해 기준 재활용 폐기물 수입 총 량은 254만에 이른다. 수출량(17만) 의 15배다.

이중 석탄재(127만t·50.0%), 폐배터

리(47만 · 18.5%), 폐타이어(24만 · 9.5%), 폐플라스틱(17만 · 6.6%)이 전체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유연탄을 태우고 남은 재로, 산업폐기물에 해당 하지만 시멘트 보조 원료로도 쓰인다. 폐배터리는 금속류 추출 원료, 폐타 이어는 재생타이어와 고무제품을 만 들거나 시멘트 소성로의 열적으로 각 각 활용된다. 폐플라스틱 역시 실을 뽑아내는 팰릿이나 플레이크의 원료 로 쓰인다.

고 스인다. 이채은 환경부 지원순환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폐기물 수입량이 지원을 활용할 목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재활용산업 발전에 따른 것으로 급격하게 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내에 남아 도는 폐기물이 있음에도 외국에서 수 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국가별 수입량을 보면 석탄재의 전량은 일본에서 들여온다.

일본과 함께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 사능 검사를 진행하는 러시아의 경우 이번에 수입통관 절차가 강화되는 3 개 품목의 수입량 상위 국가에 포함 돼 있지 않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수입량 1위(6만6121t), 폐배터리 수입 량 2위(7만1123t), 폐타이어 수입량 4 위(6923t)다.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조치인 셈이다. /뉴시스

"가짜뉴스 넘치는 세상에서 더욱 중요해진 것은 '진실'"

문 대통령, 기자협회 창립 55주년 기념 영상 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가짜뉴스 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고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 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기념 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 같이 전한 뒤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 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커지 고, 그만큼 우리 공동체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수영 시인의 말을 인용하며 언론에 균형 잡힌 보도를 요청했 다.

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은 언론 자유에 있어서는 '이만하면'이란 중간은 없다고 했다"며 "언론자유 를 향한 길은 끝이 없다. 무엇보다 도 진실을 밝히려는 기자정신이 가 장 중요하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실 것이 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을 언제 나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정착 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 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축하 메시지도 함께 냈다.

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 55년 은 언론의 자유를 지켜온 역사"라 며 "한국기자협회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압제와 싸우며 진실 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기자협회 회원 여러분 의 노력과 국민의 지지 덕분에 우 리 언론의 자유는 후퇴했다가도 다 시 회복하고 전진해왔다"며 "언론 의 자유를 위해 불굴의 의지로 노 력해온 기자협회 여러분께 감사드 린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 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통해 가짜뉴스 경계령을 내 린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 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조국 사모펀드 투자 법적 문제 없다"

이인영 민주 원내대표, "투자 약정의 한도" 적극 엄호

됐다"고 조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시진전 개막 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투자 약정의 한도인 거지 그만큼 투자한 것 은 아니지 않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 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 자의 가족이 사모펀드에 총 재산 규모 보다 큰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투자약정을 맺었다. 실제 조 후보자 가족이 납입한 금약은 10억원 정도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거듭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한미군사훈련 이 끝나는 대로 북미 간에 비핵화실 무협상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크 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했다.

이어 "(북한이)북미관계 개선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최근 경직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는 쌍두마차여서 어느 한 바퀴만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킬 수 있지 않다"며 "동시적 접근에 대해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 절 경축시에 대해 "대통령께서 책임 있는 경제 강국, 대륙과 해양 교량강 화, 평화로 도약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향후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